

대법원 2024도329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충청남도의회 당선자인 피고인 1과 그 지지자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당내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금품 제공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

대법원 1부(주심 대법관 김선수)는, ① 피고인 1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 피고인 1과는 별도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데도, 원심이 이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여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아,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·환송하였고, ②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,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였음(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4도3298 판결)

1. 사안의 개요

가. 피고인들의 지위

- 피고인 1은 2022. 6. 1.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의회 의원 당진시제2선거구(송악읍, 신평면, 송산면)에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, 2022. 5. 3. 실시한 국민의힘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어 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임
- 피고인 2는 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 특보이자 피고인 1을 지지하는 사람임

나. 공소사실의 요지 ➡ 공직선거법 위반

-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을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여 충청남도의
회의원으로 당선되게 하려고, 당시 당진시의회의원 당내경선 후보자로서
지지자를 확보한 A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A를 지지하는 사람들을
포섭하기로 공모함
-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. 5. 1. A와 그 배우자를 당진시 소재 식당으로
오게 한 후 그들에게 합계 38,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
- 피고인들은 곧이어 위 식당 건물 밖으로 나간 다음, 피고인 2는 A에게 전
화하여 A를 식당 건물 앞길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 1에 대한 지지를 부탁
하면서 A의 상의 주머니에 현금 50만 원을 집어넣었으나 A가 이를 즉석
에서 반환함
-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,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을 후보자로 선출되
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및 그의 배우자에게 식사비 38,000원 상당의
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, 현금 50만 원의 제공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피
고인 1은 충청남도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선거구민에게
기부행위를 하고,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위하여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
를 함

2. 소송경과

- 제1심 : 피고인들 각 유죄(피고인 1 ⇒ 벌금 200만 원, 피고인 2 ⇒ 벌금
400만 원)
- 원심 : 피고인들 항소 기각
 - 피고인들이 상고함

3. 대법원의 판단

가. 쟁점

- 원심에 피고인 1과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접수기록 통지를 누락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있는지 여부
-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

나. 판결 결과

- 피고인 1의 상고를 인용하여 이 부분 사건을 파기·환송하고,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함

다. 판단 내용

- 피고인 1의 상고이유 관련
 - 제1심 변호인이 제1심에서 자신을 송달영수인으로 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송달장소를 자신의 사무소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, 변호인의 사무소는 피고인의 주소·거소·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가 아니고, 제1심에서 한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원심법원에 미치지 않음 ⇒ 피고인 1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, 피고인 1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
 - 피고인 1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 피고인 1과는 별도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, 그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음
 -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,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
- 피고인 2의 상고이유 관련

-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

4. 판결의 의의

- ▣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번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번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사선번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, 이를 위반한 원심판결을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파기·환송한 사례임